(07. 5. 16, 대통령님 국무회의 연설 정리, 국정홍보비서관실)

<개헌-새로운 리더십을 위하여>

3월 13일 국무회의 연설 주제별 정리

<목 차>

□ 민주주의의 역사 - 6월항쟁 20년 전과 후

o 변화는 국민 요구와 역사의 방향이 일치할 때 오는 것

o 군사독재 - 억압기제와 경제적 욕구의 결합

o 87년 6월항쟁 -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와 반독재 리더십의 결합

o 87년 이후 20년, 변화 이끈 것은 국민들의 개혁 욕구

□ '개혁 이후',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o 개혁만으론 한계…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은 미성숙

o 보편적 욕구를 퇴행이 아닌, 진보의 방향과 맞춰야

o 참여정부의 공약인 '개혁'도 과거의 것

o 참여정부의 전략 - 원칙과 혁신

o 참여정부의 경제·사회적 비전 - '비전 2030'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비전 - 상생의 리더십

o 문제는 내부갈등·외부위협 극복할 수 있는 정치체제 구축

o 통합과 상생 - 참여정부 미완의 과제이자 정치적 비전

o 민주주의의 정의(定義) 구현은 상생의 정치에서 출발

□ 왜 개헌을 말하는가 1 - 통합 위한 규범과 제도개선

o 단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는 통합 어려운 제도

o 5년 단임제로는 책임정치, 미래 내다보는 정치 불가능

o 임기 일치로 '반대의 정의' 앞세운 여소야대 극복해야

□ 왜 개헌을 말하는가 2 - 신뢰회복 위한 정치개혁

o 진실과 책임 없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o 개헌안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토양 갖추자는 제안
o 행정수도, 작통권, 개헌…누가 약속하고 누가 깼나
o 무책임한 말 바꾸기, 비겁한 침묵만 남아서야
o 정략과 타산만 난무, 정치권에 대의(大義)를 묻는다

□ 왜 개헌을 말하는가 3 - 바로 지금이 최적기

o 변화와 개혁, 제 때 이루어져야
o 지금 개헌안은 더 많은 논의 위해 첫 단추 푸는 과정
o 또다시 20년을 흘려보내야 할 아무런 이유 없어

□ 개헌은 역사의 진보를 축적해가는 과정

o 갈등 극복하고 새 시대 들어서기 위한 '결정적 개혁과제'
o 결과 얻지 못하더라도 과정 자체에 가치 부여할 수 있어야
o '옳은 일은 원칙대로 실천', 역사의 진보 이루는 길

(07. 5. 16, 대통령님 국무회의 연설 정리, 국정홍보비서관실)

〈전 문〉

개헌 – 새로운 리더십을 위하여

□ 민주주의의 역사 - 6월항쟁 20년 전과 후

o 변화는 국민 요구와 역사의 방향이 일치할 때 오는 것

한 시기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가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국민들은 그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역사 진보의 방향과 일치할 때 국민의 요구는 사회 변혁의 커다란 힘이 돼서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결합되고, 그래서 역사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강렬한 욕구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4·19 전후를 봤을 때, 반공논리를 전제로 한 억압의 기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던 반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했던 경제적 욕구는 억압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개의 욕구를 적절하게 조절해 내지 못하는 동안 소위 5·16이라는 과정을 통해 군사정권이 성립했습니다.

o 군사독재 – 억압기제와 경제적 욕구의 결합

역사의 방향에 일치했든 안 했든, 군사정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소는 결국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억압의 기제가 살아 있었으며 소위 반공독재, 안보독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억압의 명분이 살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 하는 강렬한 욕구를

자기들 지배의 정당성과 결합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독재정권이 체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 발전과 독재가 필연적으로 결합되느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독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논쟁할 수도 없었고 논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필연적 과정이다, 아니다'라는 정설은 나와 있지 않고 대체로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는 그들의 공로이다' 또는 '군사독재의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민주적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며,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길을 걸어왔을 뿐이다. 그 시기 다른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선택을 했지만, 경제성장이라는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산업화의 공로는 인정해 준다' 이런 수준의 사회적 공론이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그 시기에는 국민들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결합시켜냈고 일부의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소위 독재정권의 지속적인 지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정통성을 얻고 있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 그 시기의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역사의 발전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라고 봐야 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든 결과는 그렇습니다.

o 87년 6월항쟁 –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와 반독재 리더십의 결합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강렬한 또 하나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간적 대우에 대한 욕구,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것이 강력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끓어올랐고 결국 87년 6월항쟁을 통해 독재정권의 후퇴, 또는 독재정권의 항복으로 해소됐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욕구는 우리 한국의 역사가 나아가는 중장기적 방향과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로 결합됐습니다. 이 보편적 가치가 독재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리더십과 결합해서 87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소위 직선에 의한 정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ㅇ 87년 이후 20년, 변화 이끈 것은 국민들의 개혁 욕구

6공화국은 실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군사 쿠데타에 뿌리를 둔 세력이어서 도덕적 정통성에 여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 의해 선출된 절차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공화국 시절에도 상당한 민주주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재의 시기에 이루어졌던 억압의 체제·제도 또는 특권과 부패의 체제, 권위주의 체제와 같은 봉건적, 구시대적 질서 청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강력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렇게 진보해 왔습니다. 개혁이었습니다. 개혁이라는 주제가 그동안 국민들의 역동성을 모아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욕구로서 존재했습니다.

□ '개혁 이후',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ㅇ 개혁만으론 한계…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은 미성숙

지금 국민들에게 '개혁합시다' 그러면 시큰둥합니다. '민주주의 합시다', 역시 시큰둥합니다. 그렇다면 이후 한국사회 역사 발전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역사 발전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다음 시대에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지역적으로,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두에게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당신들의 욕구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경제'라고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경제발전의 전략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전략론에 가서는 바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지방과 중앙이 갈라지고, 민주노동당 노선과 절대적인 기득권 계층 사이에도 갈라집니다. 소위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경제발전, 풍요한 사회로 가는 전략을 놓고 상당히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다음 시기에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풍요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라는 희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보편적 욕구가 무엇인가를 짚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욕구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참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o 보편적 욕구를 퇴행이 아닌, 진보의 방향과 맞춰야

우리는 보편적 욕구를 역사 퇴행의 길이 아니라 진보의 방향과 맞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보편적 요구를 가장 강력하게 묶어냈던 지도자가 히틀러였습니다. 국민들이 대개 질서를 원하고, 변화를 원하고, 안정을 원하고, 성장을 원하는데, 어느 집단도 여기에 대해 보편적인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장의 욕구에 영합하는 영합적 가치, 영합적 리더십이 국민들의 정서를 선동해 끌어 모았고, 역사를 뒤로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그때의 상황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반동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우리 정치가 표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주화와 독재 타도. 수십 년간 그것을 통해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끌어왔습니다. 개혁 가지고 20년을 끌어왔는데 이제 '개혁' 두 글자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 사회의 비전을 무엇으로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저 막연하게 경제 성장, 민생파탄 해소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 불만을 결집시킬 수 있는 것 이외에 지금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o 참여정부의 공약인 '개혁'도 과거의 것

참여정부는 그 비전이 없는가? 참여정부의 공약은 실제로 내용이 무엇이었던 간에 과거의 것이었습니다. 개혁이었습니다. '왜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까?' '어째서 사람들이 나를 찍었을까?' '절반의 사람이라도 왜 뭉쳐서 나를 찍었을까?' '새로운 정치'라는 것이 가장 주요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 새로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정치의 기치를 들고 나와 과연 누가 얼마만큼 성공할 것인가. 아주 과장된 것이지만, 지금은 역설적으로 '무능해도 좋다, 경제나 살려라' '부패해도 좋다, 경제나 살려 내라' 이런 구호가 나오는 수준이 됐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정치'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개혁의 욕구는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치적 리더십의 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의 동력도, 역사 발전의 동력도 될 수 없습니다.

o 참여정부의 전략 – 원칙과 혁신

참여정부가 제기한 동반성장, 양극화 해소, 균형발전, 비전 2030, 사회투자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등은 국민들 앞에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입니다. 비전 2030을 통해 여러 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종합하고, 우리 한국의 현실적 과제를 분석해서 내놓은 여러 전략 가운데 첫 번째 전략이 '원칙대로 간다'였습니다. 심지어 경제정책에서도 '원칙대로 간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혁신이 답이다.' 이것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교육부가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되고 그 부처의 장을 부총리로 했다는 것부터가 우리가 이미 혁신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혁신이 답이다', '인적 자원이 답이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과학 기술이 답이다.' 그것이 참여정부가 내놓은 카드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생각해 보면 '혁신이 답'이라는 전략이 나옵니다. 정부 혁신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실천했던 것은 무엇인가. '원칙이 답이다'라고 했던 이 내용을 전부 풀어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원칙 중심의 사회-이런 것을 오늘날 경영학 이론에서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회의 경제가 성공하고 그 사회에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과 토대로서 소위 사회적 자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칙이 답'이라는 전략과 민주주의가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ㅇ 참여정부의 경제 · 사회적 비전 – '비전 2030'

2003년, 2004년 소위 가계신용의 위기, 신용 불량자 문제, 금융 위기 등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시했던 것이 동반성장 전략이었습니다. 그런 이론들이 계속 발전하고 다듬어져서 2030이란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사회투자전략, 구호로서는 '함께 가는 희망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이란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 '쾌적한 환경과 품위 있는 문화를 누리는 사회', '오늘의 불안 또는 미래의 불안에 대해 대책이 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불안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대책이 있는 사회, 그것이 경쟁력 있는 사회이며 이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결국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우리 사회 환경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 투자라고 이름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한 성장 동력의 확충, 인적 자본의 고도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비롯해서, 대외적 개방과 능동화, 사회복지 고도화 이렇게 다섯 개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과 복지를 균형 있게, 그리고 복지를 투자라는 개념으로 전환해서 이런 비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비전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성장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와 같은 외부적 위협과 내부적인 갈등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비전 – 상생의 리더십

o 문제는 내부갈등 · 외부위협 극복할 수 있는 정치체제 구축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외부의 위협과 내부 갈등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서로가 의심과 불신 속에서 전부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대립과 이해관계 갈등을 잘 통합시켜 믿음을 가지고 상호 간에 투자하고, 그 투자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안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도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사회의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금 그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 비전에서 우리가 말했던 상생이라는 것입니다.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o 통합과 상생 – 참여정부 미완의 과제이자 정치적 비전

타협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가치도 존중하고, 상대방의 요구와 주장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이해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고, 상호 양보를 통해 또는 상호 간에 긍정적 투자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가 국민 통합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개혁은 이전부터 해왔던 것을 거의 다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합 부분은 아직까지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도 못했고, 지역 간 통합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실패의 요소를 안고 있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의 민주주의는 첫째로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둘째로 지금 국민이 느끼는 불만과 욕구를 직접 해결하는 수단과 과정의 인과 관계가 너무 멀어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과 관계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아이 학비를 마련하는데, 직접 돈을 버는데 바로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투쟁적 리더십, 투쟁적인 지도자로 계속 보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실감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가 참여정부에서 성공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o 민주주의의 정의(定義) 구현은 상생의 정치에서 출발

저는 통합에 대해 '나누어서 서로 대결하고 경쟁해서 하나로 통합되어 나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제도와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책을 보니까, 1787년 미국 헌법을 만들 당시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연방헌법 제정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기록 속에 정당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정당을 나누어서 서로 대립·투쟁하고, 그 과정을 통해 국가적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의(定義)가 한국 국민들에게, 여기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서로 비판하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경쟁하면서 국가라는 공동체의 목표를 통합시켜 나가는 이 과정이 민주주의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사회 분야의 전략은 물론, 우리와 또 다른 전략을 가

진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양보·타협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의 측면에서 그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전부 통틀어서 얘기했을 때 상생의 정치, 상생의 경제, 상생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생의 가치를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우리 사회가 더불어 함께 잘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왜 개헌을 말하는가 1 - 통합 위한 규범과 제도개선

o 단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는 통합 어려운 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욕구의 문제, 충족의 단계와 역사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제들을 일괄해서 펼쳐 놓고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야말로 이제는 투쟁의 시대와 개혁의 시대에서 상생의 민주주의를 해 나가야 될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5년 단임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 제도야말로 갈등을 통합하기 가장 어려운 제도입니다. 규칙에 의해서 결론이 나도 승복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상생의 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 단임제는 당시의 특수한 사정으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특별히 손질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o 5년 단임제로는 책임정치, 미래 내다보는 정치 불가능

대통령 단임제는 1980년 신군부가 국민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이미

채택한 것으로 민주주의 제도로서는 합리적 근거가 미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여러 차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과 그를 통한 독재의 연장에 시달린 국민들은 단임제가 장기 집권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고, 정권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도, 정권을 잡아야 하는 사람들도 각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단임제를 찬성하여 채택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임제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국정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임제 아래서는 연임이 없으니 임기 3년이 지나면 당정관계에 레임덕이 옵니다. 책임정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임을 걸고 국정을 수행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본질에 맞는 것입니다.

o 임기 일치로 '반대의 정의' 앞세운 여소야대 극복해야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정통성이 국회에 있는 것입니까, 정부에 있는 것입니까?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우선하는 것입니까, 국회가 우선하는 것입니까? 위임받은 권력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두 개가 갈라져있습니다. 국회 다수당과 정부의 다수당이 갈라져 있으니까,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임기가 서로 다르니 선거가 너무 자주 돌아오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해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책임 있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합니다.

본질적으로 야당은 책임을 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을 본분으로 생각하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도의 정의, 반대의 정의가 지배해 왔던 역사적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는 선이요, 찬성은 야합'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상 더 독재의 시대가 아닙니다. 견제가 필요하다고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들 일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묻고 정권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일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책임을 물어야지 일을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아 놓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올바른 견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내용을 이번 개헌안에 담은 것입니다.

제도는 사회적 규범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헌법은 모든 규범의 근본입니다. 불합리한 규범은 고쳐야 합니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좋은 규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 왜 개헌을 말하는가 2 - 신뢰회복 위한 정치개혁

o 진실과 책임 없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제가 개헌을 발의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정치의 신뢰'를 위해서입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 한국의 정치풍토를 개혁하자고 하는 의제를 이 개헌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의 요구입니다.

'신뢰'는 규범 못지않은 사회적 가치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신뢰가 낮은 사회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래 경영학자들은 한 나라 경제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

는 사회적 자본이고,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는 신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국가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도 신뢰는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권력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해왔고, 따라서 국민들은 아직도 정치를 최고의 권력으로 생각하고 최고로 높은 책임과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 정확한 진실을 기반으로 한 정치, 자기의 소신과 신념에 근거해 일관된 정치와 일관된 가치를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치적 덕목입니다. 진실을 토대로 일관되게 가치를 얘기하고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정치제도가 민주적으로 개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제든, 민주든 어떤 제도 위에서도 정치는 불가능해 집니다.

o 개헌안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토양 갖추자는 제안

진실을 토대로 하지 않는 정치는 어떤 제도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말에 가치가 실리지 않고, 일관성이 실리지 않는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제도로도 이것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보증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좋은 헌법이 있어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를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가능한 토양,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의 토양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 토양을 갖추자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정치 문화에서 정치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o 행정수도, 작통권, 개헌…누가 약속하고 누가 깼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수도 이전, 정치권과 언론 등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됐던 사안입니다. 언론을 예로 들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전에 극찬하고 또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맹렬한 반대로 돌아서서 반쪽을 내고 말았습니다.

작전통제권 역시 그들이 찬성했고 그들이 극찬했던 사안입니다. 평시 작전통제권이라는 껍데기만 돌려받은 것을 가지고는 제2창군이라고 얘기하고, "다음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전부 다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후보시절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선자 시절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이전부터 최근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분들은 현직에 있을 때 대부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 개정은 찬반의 갈등이 있었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찬성해서 '시기가 언제냐?' '이 어려운 주제를 언제 할 것이냐'는 문제에 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 5년 단임으로 인해 정부가 힘 있게 일할 수 없고 레임덕이 빨리 온다는 점 등이 아닙니까? 거기에 중심이 두어져 있었고 그렇게 해서 개헌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언론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언론들이 질문을 통해 정치인들의 입에서 개헌 이야기를 끌어내어 보도한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사설로써 주장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다 그랬습니다.

모두들 하자고 했고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이 먼저 말을 바꾸고 다른 정당들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o 무책임한 말 바꾸기, 비겁한 침묵만 남아서야

처음 한나라당이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한나라당 소속 차기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이 올라가서 굳어져 버린 것처럼 보인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한나라당은 대선구도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개헌에 대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음으로 미루자는 것이었습니다.

2002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도가 높을 때는 개헌이 필요 없다고 말을 했다가 소위 '대세론'이 무너지자 개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선에 들어가서 백중세가 되자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한이 있어도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개헌을 하면 어떻게 되어서 대선 구도가 흔들리게 되는 것인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나, 어떻든 말 바꾸기는 이렇게 정략적인 계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정략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어서 개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정권으로 미루자고 합니다.

무조건 '정치판 흔들리면 우리가 거의 다 잡은 정권 놓친다'는 식입니다. 거기다 기득권 언론들은 적극적으로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비겁한 언론은 따라 가고, 비겁한 시민단체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o 정략과 타산만 난무, 정치권에 대의(大義)를 묻는다

정치는 공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정치의 요체는 대의명분과 세력,

그리고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를 보면 대의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정략과 타산만 있었습니다.

명분 없이 세력만 가지고 이익을 쫓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책무나 도덕적 가치에 대한 판단도 없이, 단지 '소수이면서 왜 개헌을 제기하느냐, 그래서 개헌이 되겠느냐'는 식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러하니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제 선택이 그래야 합니까? 지금 인터넷에 가면 '국민들이 싫다는데 왜 자꾸 하자고 해?' 이럽니다. '왜 싫습니까?' 물으면 대답이 없습니다. 굳이 이유라면 '큰 당이 싫어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가치판단을 멈춰버립니다. 참 걱정입니다. 가치 판단을 멈춰버린 국민이 가장 위험한 국민입니다.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국민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인데,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왜 개헌을 말하는가 3 - 바로 지금이 최적기

o 변화와 개혁, 제 때 이루어져야

중요한 것은 '기회'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제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그때 인천공항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찌 동북아 허브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6월항쟁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북방외교, 금융실명제, 4대 부문 개혁, 정권교체, 일일이 말을 하자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헌법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야 합니다.

o 지금 개헌안은 더 많은 논의 위해 첫 단추 푸는 과정

'그렇다면 확 뜯어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다수당이 아니면 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확 뜯어고치지요' 그런 얘기 꺼내면 정말 시끄러워집니다.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문을 열 때 바깥에서 한꺼번에 열두 대문을 동시에 열고 안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찮지만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서 한꺼번에 옷을 확 벗어버리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추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개헌안이라는 것은 첫 단추를 푸는 과정입니다. 첫 대문의 빗장을 여는 과정입니다.

o 또다시 20년을 흘려보내야 할 아무런 이유 없어

20년 만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는 피해 보자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를 피하기 위한 것이 임기 일치라는 내용적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토론의 장을 열어놓자,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것이 금년에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올해에 헌법을 고치지 못하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의 기회가 영영 물 건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장기간 국가 발전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처럼 중요한 기회를 떠내려 보내야 합니까? 그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 개헌은 역사의 진보를 축적해가는 과정

ㅇ 갈등 극복하고 새 시대 들어서기 위한 '결정적 개혁과제'

헌법 개정은 한국의 역사가 가야 할 진보의 방향을 멀리 내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기 위한 제도 하나를 우리가 풀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정권의 정통성, 정부의 정통성을 일치시키고 거기에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 갈등 요소들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의 장이자 다음 토론의 장을 열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 개정이라는 제도 개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보기에 따라 작은 개혁 과제이지만, 결정적인 개혁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ㅇ 결과 얻지 못하더라도 과정 자체에 가치 부여할 수 있어야

‘개헌을 하는데 돼야 할 것 아니냐,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무엇이든 국민들의 합의를 얻어나갈 때는 안 될 때부터 출발해서 차근차근 꾸준히 의제를 공론화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제도 개선 과제가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 하나만 해도 한 조항씩 한 조항씩 수십 년을 다듬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 꼭지를 우리가 따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축적돼 오는 논쟁 속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안목을 갖고 헌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나간다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불확실하더라도 가치에 대한 확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으면 합니다. 개헌이라는 주제가 가치가 있다면, 결과를 얻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설사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고, 그 가치가 축적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고, 과정 자체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때라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o '옳은 일은 원칙대로 실천', 역사의 진보 이루는 길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면 리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쳐 나가야 할 역사적 과정입니다. 꼭 이 개헌을 안 하더라도 다음에 다른 어떤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이 헌법 하에서라도 정치인들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정치적 환경·풍토·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하나하나 만들어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궁극적으로 제가 앞으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하나하나 원칙대로 해왔던 것 말고는 다른 아무런 재주도 없었습니다. 개헌도 그렇게 역사를 축적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잘 공론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진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